



2016년도 제2회 학봉상 논문 공모사업

현대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의 기원과 전망

세대균열과 세대주의를 넘어서

송은호[†], 이가현[‡]

- I. 들어가며 - '청년수당'을 둘러싼 정치논쟁
- II. 세대개념에 대한 검토
- III. 세대균열 구도에 대한 비판
 - 1) 선거에 나타난 세대균열 관찰
 - 2) 단일균열 구조 관점 비판
- IV. 세대주의 관점의 비판
 - 1) 일상 속의 세대주의 관찰
 - 2) 세대주의 관점 비판
- V. 나오며 - 세대균열과 세대주의를 넘어서

〈국문초록〉

이번 연구는 최근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있었던 '청년수당'과 관련된 논의에 주목하였다.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가 장기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준비과정에서 필요한 금전적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세대정책이다. 하지만 세대정책에 대한 논의는 세대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갈등구조로 조장하는 갈등구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세대정책에 대한 고민이 세대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2)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전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언제부터 세대균열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선거 국면에서 세대균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관찰하였다. 관찰을 바탕으로, 지역균열로부터 세대균열의 원인을 유추하는 한편, 세대갈등은 세대균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세대균열만이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균열 구조가 문제임을 밝혔다. 이런 이유로 단일균열 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단일균열에 대한 반대흐름을 확인하였다.

[†] 서강대학교 물리학 전공/생명과학 전공/바이오융합 연계전공, songuno1@sogang.ac.kr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 전공/정치외교학 전공, rkus2626@sogang.ac.kr

후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 언론과 학계에 의해 세대주의가 강화되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세대주의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점과 그 존재가 허구적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였다. 또, 세대주의를 심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통해, 세대 사이의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에 대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사회는 세대갈등이 시작될 조짐은 보이지만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세대갈등의 양상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이 골든타임에서는 단일균열 구조에서 세대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과 세대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세대주의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세대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을 통해 비판 대상과 연대 대상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자신이 속한 세대와 다른 세대가 직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 들어가며 - ‘청년수당’을 둘러싼 정치논쟁

2016년 8월 한국사회는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논쟁으로 시작되었다. 논쟁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¹⁾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는 관내 20대 청년 144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장기미취업, 불안전고용 등의 문제에 처해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수당을 내놓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²⁾과 무분별한 현금지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이 정책에 반대하였다. [최윤정(2016.08.03.)]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논쟁은 정치권이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³⁾,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⁵⁾ 등으로 나타났다. 또, 절차적으로 보장된 민주적 의사결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청년문제를 성남시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서울특별시는 고용정책으로 접근한 것은 정책의 다양성을, 어느 수준의 사람에게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주는 효과가 있다.

동일한 정책 목적에 대해서 정책 당사자에 따라 다양한 문제해결 접근이 가능하면, 그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양선희(2016.08.09.)는 한 해 청년정책예산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지만, 청년직접지원 형태보다 고용촉진지원금, 청년취업인턴제 등 사업주에 지급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지원은 고용 통계에 대한 도움을 주지만, 청년 개인의 취업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양한 문제해결 접근의 가능성은 이런 기존 정책의 한계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논쟁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 보여준 몇몇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면 또 다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정책에 대한 명명(命名, naming), 정책에 대한 일부 정치인의 발언과 현수막 경쟁, 송사를 동반하는 관계기관 사이의 경쟁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은

-
- 1) 공식명칭은 ‘청년활동 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제도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 2)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을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사업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신설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평가를 통해 선발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공모전’이라고 보고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세형(2015.11.13.)]
 - 3) 성남시에서 2016년 1월부터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24세 남녀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의 배당금을 지원하는 내용 [김향미(2016.01.12.)]
 - 4)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개념이 강한 반면에,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은 고용정책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만 적용된다.
 - 5)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이라는 3단계로 구성된다.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에 대응되는 부분은 3단계인 취업알선 부분으로, 월 20만원씩 3개월간 숙박비나 교통비를 지원한다. [안승섭, 최윤정(2016.08.12.)]

최근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세대균열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부르디외(Bourdieu, 1985)는 명칭이 ‘공식적인 지칭 및 그것과 결부된 물질적, 상징적 이익을 둘러싼 투쟁과 협상의 상태를 기록한다.’고 파악하면서, 명명이 주술적인 권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각 관계기관이 정책에 대한 명명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통해서 청년수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다.

모든 명명의 차이가 세대균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의 경우에는 전자는 기본소득 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취업지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이 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졌음에도 다른 정책 명칭을 가진 것은 정책 당사자의 서로 다른 정치적 함의를 나타내기도 한다. 가령,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전자는 청년정책이라는 점에, 후자는 고용정책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중앙정부와 달리 ‘청년’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에 대해, 이승종(2001)의 복지정책향론⁶⁾이나 김태일(2001)과 신정관(2013)의 정치적 선택⁷⁾과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 청년층으로부터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⁸⁾ 청년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을 증가시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명명의 차이의 정치적 함의는 유력 정치인의 일부 언행과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의 현수막 경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수당에 대해서 대중융합주의적인 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한다든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한 것이 이에 대표적인 예이다. [최윤정(2016.08.03.)] 이런 언행들은 청년지원정책으로 청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정책의 대중융합주의 여부에 대한 논의로 와전시키게 된다.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의 일부 현수막 역시 이런 갈등국면을 형성하였다. [김병규(2016.08.14.)] 서울특별시는 직권취소에 대한 반박으로 내건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구호와 보건복지부가 정책 홍보차원에서 내건 ‘일자리, 청년의 내일을 위한 가장 큰 복지입니다.’라는 구호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전자는 청년수당의 문제를 ‘청년 vs 비(非)⁹⁾청년’ 패러다임을 이끌었다는 점, 후자는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 6) **복지정책향론**이란 지방의 정책결자의 일차적 목표는 재선에 있기 때문에, 조직의 존속발전과 그 구성원의 현직 유지 및 승진 등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중요시한다.
 - 7) **정치적 선택(정치적 관점)**이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축소가 타당하더라도 주민의 지지 확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 8)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청년층에 19~29세에 61.4%, 30대에 60.6%의 지지를 받으며 당시 상대였던 정문준 후보가 각각 17.1%, 17.7%의 지지를 받은 것을 크게 압도했다. (이 여론조사는 MBC/SBS가 의뢰하고, ㈜리서치앤리서치가 유선/무선전화면접으로 2014년 0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경우이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5%p이다.)
 - 9) ‘반(反)청년’이 아니라 ‘비(非)청년’이라는 명명에는 한국사회에서 아직은 세대 사이의 적대적 정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청년취업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즉,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입장은 청년수당이 다른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년층을 견제하는 맥락이 아니라, 청년수당이 청년의 취업을 방해한다(도덕적 해이)고 보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명명의 문제, 유력 정치인의 언행이나 관계기관의 현수막 경쟁은 서울특별시 청년층과 긴 시간 동안¹⁰⁾의 소통의 결과물로서 나온 ‘청년수당’을 청년층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와전시킨 측면이 있다. 중앙중부가 청년수당을 ‘포퓰리즘’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가 ‘청년 직권취소’ 구호로 맞선 것은 결과적으로 세대정책을 세대문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세대정책이 세대문제로 비화되는 부분은 2016년 8월 3일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는 **3일** 2,831명의 청년에게 50만원(8월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였다¹¹⁾. **4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¹²⁾ 밝혔다¹³⁾. 정부는 **11일**에 ‘법정부 청년수당 대응 TF’¹⁴⁾를 구축하고, **12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지원협력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이 강화방안의 골자는 기존 3단계로 구성된 취업성공패키지의 세 번째 단계에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청년수당의 직권 취소처분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다. [최희진(2016.06.19.)], [정용인(2016.08.13.)]

언론은 이와 같은 관계기관의 경쟁과정에 대해서 청년정책 개선보다는 정책에 대한 주도권 경쟁으로 비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 강화방안이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수당과 유사하다는 데에서,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청년수당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수당 부분을 추가했다는 분석[장규석(2016.08.12.)]이 이에 대한 예이다. 또, 청년에게 서울특별시 정책과 중앙정부의 정책이 양자택일(兩者擇一)¹⁵⁾을 하도록 한 상황은 청년층에게 지방정부의 수당을 받으면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낳는다는 주장이 있다. [홍수민(2016.08.08.)]

세대정책이 세대문제로 비화될 경우에는 세대 사이[世代間]의 갈등과 세대 안[世代內]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청년수당의 경우에는 실재하는 청년빈곤¹⁶⁾과 청년실업¹⁷⁾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발언이나 언론의 보도는 세대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10) 2013년부터 3년 동안 서울청년의회를 포함한 총 23회의 컨퍼런스, 포럼, 토론회에서 청년층과의 소통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11)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청년수당과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서울특별시 시장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이 유럽의 유스گار런티(청년보장, youth guarantee)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주무부처 장관은 두 정책 사이를 언급하면서 반대했다고 한다.

12)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 이 날, 서울특별시는 앞서 언급하였던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 할 수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14) 이 팀은 국무총리실 사회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부처 국장들로 구성된다.

15)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자의 경우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수민(2016.08.08.)]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35세 미만 가구 빈곤율은 2014년 12.2%로 8년 전 2006년에 비해서 1.5% 증가했다. 35~50세의 경우는 9.7%에서 6.3%로, 50~65세 15.2%에서 12.4%로 낮아졌다.

17) 통계청이 2016년 7월에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0.3%이다. 이 수치는 전체 실업률 3.6%보다 큰 수치이다. [곽래건(2016.07.14.)]

구성열(2016.08.08.)은 청년수당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공짜에 가까운 돈¹⁸⁾’이라는 주장은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 청년지원정책을 ‘무상 수당’을 제공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청년층이 취업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¹⁹⁾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현수막 경쟁에서 나타난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 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구호[김병규(2016.08.14.)]는 청년층으로 하여금 장년층이나 노년층을 ‘수당을 빼앗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통계적으로 검증된 청년빈곤의 현실을 자극한다. 이런 보도는 궁극적으로는 세대문제를 세대균열로 이어지게 한다.

한편, 이런 세대 사이의 갈등은 결국에는 세대 안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강행의지와 중앙정부의 직권취소가 대치하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청년수당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김윤종(2016.07.21.)]를 살펴보면, 찬성(53.0%)이 반대(22.1%)에 비해서 많았다. 하지만 반대한 이유에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 불가(56.6%)’나 ‘공짜로 받으면 그 이상을 바랄 것(16.3%)’이 나타난 점을 주목하면 청년세대 안에서조차도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왜곡된 시각²⁰⁾이 나타난다. 이러한 세대 안의 갈등은 세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대 안에서의 논의조차 왜곡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청년지원사업과 같은 세대정책에 대해서 정치권은 왜 쟁점화하느냐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 의문은 청년지원사업과 같은 세대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 꾸준히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청년수당만 하더라도 청년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의 문제가 어느 순간 청년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점이 쟁점화 되었다. 청년수당에서 나타난 쟁점의 변질은 정책에 대한 오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균열의 정도를 심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번 연구는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에서 세대균열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다양한 선거 국면에서 나타났는지 관찰한다. 이를 통해서 정치권이 세대균열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정치권, 언론, 학계가 세대주의를 나타내는 양상을 관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대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세대주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18) 청년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활동보고서를 본인이 계획한 구직활동에 지원금을 잘 쓰이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짜에 가까운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해서 지출내역이 확인되고,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19) 한 온라인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중 46%가 “빚이 있다”고 답했고, 그 규모는 3,449만원이다. 학비가 대부분(48.2%, 복수응답)이지만,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28.9%)와 학원 등 취업 준비비용(16.7%) 등도 많이 차지했다. [김보미(2106.04.06.)]

20) 반대의견의 비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산적이지 않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빈곤은 금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과 애초에 청년수당이 상과를 보고한다는 점에 ‘무상지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이다.

II. 세대개념에 대한 검토

‘세대’라는 용어가 가지는 다의성 때문에 세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연구에서 이용하는 개념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1) 사회적 균열과 사회적 세대의 개념을 알아볼 것이다. 특히, 사회적 세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2) 세대의식의 실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의식에 대한 개념도 알아볼 것이다.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이란 사회구성원 사이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이 집단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어떤 사회에 사회적 균열이 나타나면 그 사회의 구성원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전용주(2009)] 사회적 균열은 이념, 지역, 세대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이념균열은 ‘이념’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이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념적 다양성을 가로축 방향으로 표현한다면(편의상 왼쪽 방향은 진보성향, 오른쪽 방향은 보수성향이 라고 하자), 이념적 균열은 세로축 방향의 수직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념적 균열은 선거 상황에서 수직선으로 표현되는 이념적 균열은 왼쪽에 있는 유권자는 진보정당에, 오른쪽에 있는 유권자는 보수정당에 투표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균열은 시기에 따라서 그 기준은 변화하게 된다. 이른바 선거의 구도에 따라서 지역주의가 강할 경우에는 지역균열(regional cleavage)이 강하게 드러나며, 이념대립이 강할 경우에는 이념균열(ideological cleavage)이 나타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세대균열(世代龜裂, generational cleavage)** 역시 시간에 따라서 한국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부침(浮沈)을 계속되어 왔다.

전상진(2002)은 한국사회에서 세대에 대한 관심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자체의 모호성과 다의성에 인해서 과학적 탐구가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대라는 개념이 가지는 다의성에 대해서, 박재홍(2009)은 세대 이름을 생산하는 3대 주체인 대중매체, 기업과 광고기획사, 정치권으로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래 세대명칭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3대 주체가 세대명칭과 관련된 신조어 생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각각 시대풍속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기 위해(문화비평), 마케팅 대상의 층화와 차별화를 통한 판매 확대와 이윤 증식을 위해(기업, 광고기획사), 유권자 분할 포섭을 위한 선거 공학적 계산을 위해(정치권)서이다.

이번 연구는 정치권이 선거 공학적 계산에 의해 이용하는 사회적 세대(social generation)²¹⁾이다. 이 개념은 1928년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 문제(des Problem der Generation)』에서 나타난 사회적 세대에 대한 내용[전상진(2002)]이다. 칼

21) 정치적 세대(political generation)이라는 용례도 존재한다. Rintala(1968)에 의하면, 형성기(formative period, 주로 청년기)에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그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정치관을 갖는 연령집단(age cohort)을 말한다. [정진민(1992) 재인용] Liebau(1997)와 같이 사회적 세대와 정치적 세대를 동일하게 보기도 하고[전상진(2002) 재인용], 사회적 세대의 하위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도 두 용어를 동일한 용어로 간주할 것이다.

만하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한 유럽대륙에서 나타난 세대갈등²²⁾에 주목하였다. 이 세대갈등 양상은 사회 참상의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다는 신세대와 그런 신세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는 기성세대의 갈등이었다. 칼 만하임은 이런 세대갈등 양상은 단순히 세대 사이의 차이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 그리고 세계관의 정립을 둘러싼 논쟁의 수준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출신배경에 상관없이 시대의식(Zeitbewusstsein)을 공유하면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만하임 이전 시대와는 크게 다른 부분이다. 만하임 이전에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젊은이 사이에 공유하는 시대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로부터 만하임은 **사회적 세대(社會的 世代, Social Generation)**²³⁾를 청소년기(17~25세)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의식, 문화, 지식을 갖게 되는 동일한(유사한) 출생 코호트(birth cohort)로 정의한다. 세대에 대한 만하임의 정의는 생물학적 조건(출생 코호트)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부여되는 동질적인 집단 의식에도 주목했다는 점[Mannheim(1964)/전상진(2002) 재인용]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부터 만하임 [Weymann(1955)/전상진(2002) 재인용]은 사회적 세대가 (1) 거시적 관점에서만 사용된다는 점과 (2)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산물, 즉 근대사회의 도래를 통해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세대개념과 구분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계급사회가 존재하던 전(前)근대사회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되고, 다음과 같은 ‘세대’의 용례 역시 이번 연구에서 제외된다.

가족적 세대(family generation)로 쓰인 용례인데, 이 용례는 혈통계보의 고리, 즉 출생서열(자식, 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Liebau(1997)/전상진(2002) 재인용] 이런 가족적 세대는 미시적 영역에 국한된다는 점[전상진(2002)]에서 사회적 세대와 구분된다. 이런 점은 한국현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문학작품과 그에 대한 비평에 잘 드러난다. 박완서의 소설 「엄마의 말뚝」 연작은 전후에 나타난 모계적 가족구조²⁴⁾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억척모성’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난다[박혜경(2003)]. 표면적으로 ‘억척모성’이란 전후에 나타난 특정 여성 세대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나타냈지만, 특정 상황의 가족(‘어머니’)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이용되었다. 이 부분은 **박재홍(2009)**이 문화비평에서 세대를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이용한 용례에 가깝다. 또, 박민규의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은 기성세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류(一流), 프로,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성공한 삶을 좇던 주인공이 실직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추어적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이다. 198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주인공과 그 이전의 부모세대 사이의 세대갈등이 나타나지만, 이 소설을 한 가족의 이야기로 본다면²⁵⁾ 이것 역시 미시 영역에 속하게 된다.

22) 원서에는 세대전쟁(Generationenkampf)으로 표기됨

23) 유럽의 사회학자의 경우에는 ‘역사적 세대(historical generation)’ [Bengtson(1993)]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다. [박재홍(2003)]

24)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족부양의 역할을 맡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형태 [박혜경(2003)]

25) 문학적 해석 차이에 의해서, 독자에 따라서 해당 소설의 주인공이 당시 세대의 일반적인 인물이고, 주인공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마추어 삶’이 당대 세대가 공유하는 집단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한다면, 이 소설의 주인공의 경험을 사회적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편’의 용례는 일반적인 문화비평에서 자주 나타난다. 1970년대 청년문화가 정의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연구한 **주창윤(2006)**의 사례를 보면, 1970년대 청년문화는 정의주체에 따라, 반(反)문화, 도깨비문화, 부분문화, 퇴폐문화 등으로 달라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세대의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가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세대를 명명되는 사례에서, 세대 명명 중에는 객관적인 기술(記述)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시각(視覺)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명명 주체가 해당 세대에 대한 주관이 덧씌우는 측면도 있다. 이런 ‘주관의 덧씌움’은 어떤 세대 명명이 거시적 영역에 속하더라도, 역사적 사건에 의해 부여되는 동질의식이 실재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우성(2007)**²⁶⁾의 경우와 같이, 신세대를 지칭하는 X세대 담론에 있어서는 연구자에 의해서 동질의식이 인위적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X세대 담론에 대해서 위의 경우와 같이 코호트 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동후(2004)**와 같이, 신세대, X세대, N세대 담론 등이 1990년대 중후반에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상업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주창윤(2006)**] 이런 시각의 배경에는 **이동연(2004)**의 경우와 같이, X세대, N세대, P세대에 이르기까지 세대의 정체성을 명명하는 기표들이 세대의 복잡한 지형을 손쉽게 규정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80년대 이후 미디어나 광고회사, 보험회사, 통신업체들이 고안했던 신세대 기표에 존재하는 의미화 과정에 대해서,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의 말을 빌려 일종의 ‘신화’라고 비판한다. 즉, 애초에 하나의 기표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이 만드는 의미를 자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X세대²⁷⁾라는 명명의 유래를 알아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X세대가 기업의 관심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기성세대가 무엇인지 모호한 새로운 세대를 묘사하는 데에 최적의 단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X’라는 문자가 기성세대인 베이비붐세대와의 이질성과 이해하기 어려운 속성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정성호(2006)**는 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상품화 미학’의 핵심적인 예로, ‘X세대라는 무정형의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기를 X세대라고 규정하지 않고, X세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X세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상’을 들었다.

X세대나 Y세대에 나타난 코호트는 실체가 존재하는 X세대의 동질적 의식을 바탕으로 했다기보다, 상업이나 학계에서 이식된 동질적 의식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지칭하는 사회적 세대에는 이런 ‘이식된 동질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세대를 배제할 것이다. 반면, 역사적 사건에 의해 실제로 만들어진 동질적 의식에 대해서는 **세대의식(世代意識, generational consciousness)**이라 지칭할 것이다.

26) **김우성(2007)**은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베이비붐세대는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출산률이 급격히 증가한 세대를 말하고, X세대와 Y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등장하였다. 한국사회의 세대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한국전쟁 직후 신생아 출산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의 집단을 베이비붐세대로 규정하고, 그 이후의 세대를 X세대와 Y세대로 규정하고, 이들 세대에는 세대 안에서 공유하는 코호트의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27) **정성호(2006)**에 의하면 X세대는 캐나다 작가 더글러스 커플랜드가 1991년에 발표한 「X세대(Generation X)」에서 유래한다. 출판 당시에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대기업 마케팅 담당자나 광고 제작자, 매스컴 종사자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 이유는 당시 소비시장 전면에 새롭게 등장한 신세대에 대한 기표가 없던 상황에서 ‘X세대’라는 이름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III. 세대균열 구도에 대한 비판

1) 선거에 나타난 세대균열 관찰

이번 절에서는 세대갈등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선거 국면에서 세대균열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볼 것이다. 앞선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균열이란 선거 국면에서 '세대'라는 기준에 따라 사회 구성원이 나누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 한국사회에서 세대균열을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2) 대통령 선거와 (3)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에서 선거균열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관찰할 것이다.

(1) 한국 세대균열 연구의 여명기

사회적 세대를 바탕으로 한 세대균열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알아보자. 한국사회에서 세대균열에 대한 초창기 연구에는 **한완상(1991)**과 **정진민(1992)**의 연구가 있다. **한완상(1991)**은 13대 대선(1987), 13대 총선(1988), 91년 지방선거(1991)²⁸⁾의 결과로부터 한국정치에서 지역균열의 영향력을 예상하면서도, 이념균열의 부차적인 변수로서 세대균열을 예상했다. 그 다음 해, **정진민(1992)**은 여당지지에 대한 세대요인의 영향이 당시 전통적으로 중요시되던 도시화의 영향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세대요인이 한국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세대균열에 대한 연구가 1991~1992년에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제1공화국(1~3대 대선)은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 의해서 이념균열이 강한 변수일 수밖에 없었으며, 제2공화국(4대 대선)은 4.19 혁명에 의해서 당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5대 대선은 5.16 군사정변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나타난 지역균열²⁹⁾이 나타났고, 이후 7대 대선까지는 박정희 정권에서의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진민(1992)]

이후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선거의 비중이 제한되었다가, 13대 대선이 되어서야 비로소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된 선거가 치러졌다. 이런 점에서 대선, 총선, 지선이 한 번씩 치러지면서 자료가 축적된 1991년 이후부터 세대균열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세대균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선거 국면에서 세대균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창기 연구자들도 지배균열이 견고한 와중에 세대균열이 부수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세대균열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은 것은 연구가 시작된 후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 때가 되면 (1) 이른바 YS와 DJ의 '양김시대'가 끝나면서 지역균열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2) 민주화 이후 세대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축적되고, (3) 정보화 과정에서 동일 세대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28) 당시 31년만에 부활된 지방선거로 여기서는 광역의원선거를 지칭한다.

29) 영남/호남은 박정희 후보를, 서울/경기/강원은 윤보선 후보를 지지하는 남북형태의 특이한 지역균열이었다.

(2) 대통령 선거 분석

2002년 이후에 있었던 3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세대균열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자. 2002년에 있었던 제16대 대통령 선거이다. [정진민(2012)] 강원택(2002)은 16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주의구도 뿐만 아니라³⁰⁾, 2030세대와 5060세대 사이의 정치적 의사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후보에 대한 연령대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20~30대 유권자의 지지가 노무현 후보에 집중되고, 50대 유권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 또, 40대 유권자는 지지운동의 명확한 균열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윤상철(2009)]³¹⁾³²⁾

윤상철(2009)은 세대에 따른 이념성향의 차이가 지지후보 차이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당시까지 견고했던 지역균열과 충돌은 안 한데에서 찾고 있다. 세대균열이 이념균열과 조응을 이루었고, 이념균열의 영호남 구도의 지역균열과 함께했다는 것이다. 또, 20~30대에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가 높은 점에 대해서, 노무현 후보지지 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구성원은 연령대로는 30대 이하가 많고³³⁾ 직업군으로는 직장인이 많은 점³⁴⁾[강원택(2002)], 새천년민주당 당 안의 경선과정에서 노선, 운영, 당 지도체제의 혁신문제가 거론되면서 젊은 유권자의 관심을 끈 점³⁵⁾을 들고 있다.

2007년에 있던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 후보가 2위 정동영 후보를 531만 표(22.6%)로 따돌리면서 압승하였다. 참여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압도적인 승리하자 통계적으로는 사회적 균열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과반에 육박하는 48.7%를 획득했음에도, 같은 계열의 정당에서 총재와 대선후보를 했던 이회창 후보가 15.1%를 득표해서 이념균열로 해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황아란(2008)은 후보선택과 정당태도에 있어서도, 이명박 후보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선호도와 연관성이 유지되지만 정동영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 선호도와 연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분석³⁶⁾을 내놓았다. 이 부분은 당시 참여정부 말기의 열린우리당 해체 과정에서 지지층 분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남영(2008)은 지역균열이 영남과 호남에서 강하게 나타났지만, 지역균열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연령층이 높을수록 이명박 후보를 연령층이 낮을수록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0) 지역균열의 정도를 강하게 보는 연구자(박명호(2009))는 16대 대선을 호남과 충청의 지역연합의 승리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31) 40대 유권자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윤상철(2009)은 당시 40대가 정치적, 정책적 쟁점에 민감했기 때문에 세대균열의 틈바구니에서 양쪽으로 분산되었다고 추측한다.

32) 이런 이유로, 송호근(2003)은 16대 대선에서 지역균열이 이전에 비해 약해지고, 세대균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과정에서 386세대가 주목을 받았다고 본다. [박명호(2009)]

33) 20대(28.47%), 30대(48.35%)로 합계 76.82%

34) 노사모의 등장과 같이 사회운동정치와 선거정치가 연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윤상철(2009)은 노무현 후보가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 비주류였기 때문에, 사회운동정치가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고 본다.

35) 이런 이유로 전체 선거인단 중에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71.4%였다고 한다. [이정진(2007)]

36) 김진하(2008)도 비슷한 분석을 하였고, 그 이유는 선거 자체의 경합성이 낮아서 당시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본다.

선거 과정에서 세대별 득표율은 집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전후에 나타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황아란(2008)과 이남영(2008)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가 조사한 유권자의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 분석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63.8%를 획득한 상황에이 실제로 사회적 균열이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외관상 다양한 사회적 균열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남영(2008)은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는 연령과 후보 선호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 크게 부각된 점으로 미루어, 연령에 따른 도덕성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이 분석이 정당하다고 해도 동일한 세대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대균열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성경룡(2015)은 2014년에 있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균열과 세대균열이 동시에 일어난 선거³⁷⁾라고 보고 있다.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18대 대선 시기의 지역균열은 영남과 호남과 같은 충성지역(loyal region)과 나머지 유동지역(swing region)으로 분화되어서 나타났다는 점³⁸⁾이다. 다른 한 가지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의 유동지역에서는 세대 사이의 투표선택의 양극화가 크게 나타난 점이다. 이내영(2012a, 2012b), 강원택(2013), 노환희(2013) 등은 ‘세대전쟁’, ‘5060의 반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성경룡(2015), 재인용]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세대에 따라서 다른 투표성향이 나타났다고 해서 세대균열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대균열은 기본적으로 세대효과(世代效果, generation effect)에 의해 나타나지만³⁹⁾⁴⁰⁾, 연령효과에 의해서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Goerres(2009)에 의하면 연령효과(aging effect)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치관, 의식, 태도, 행동이 점차 보수화되어가는 현상⁴¹⁾이다. [성경룡(2015), 재인용] 세대와 연령 모두 시간에 따른 인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요인이기 때문에, 세대효과와 연령효과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이 두 개념은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선착장에서 한 시간마다 배가 출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배가 있는 강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다면, 세대효과는 자신의 의사 결정을 어느 배에 탔는지(공유하는 세대의식)에 따라 내리는 경우이고, 연령효과는 강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연령)에 따라 내리는 경우로 비유할 수 있다.

37) 후술하겠지만, 이와 같이 한 선거에서 두 가지의 사회적 균열이 작용하는 경우에 이중균열구조라고 말한다.

38) 충성지역은 지역균열이 견고하게 지속되는 지역을 말하고, 유동지역은 지역균열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말한다.

39) 본고의 경우는 세대효과에 의한 것만 세대균열로 정의하였다. 다만, 성경룡(2015)와 같이 세대효과든 연령효과든 세대에 따른 투표 성향 차이를 세대효과로 본다.

40) 본고가 세대효과를 협의(狹義)적으로 정의한 것은, 본고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적 세대에 의한 사회적 균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대의식의 효과가 배제된 연령효과는 세대효과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41) Goerres(2009)는 연령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새로운 지식과 정보 획득의 감소에 따른 인지적 보수화, 소득과 재산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보수화,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보수화, 현상유지와 기득권의 옹호를 추구하는 정치적 보수화 등으로 든다.

성경룡(2015)는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서 18대 대선에서는 세대효과와 연령효과가 모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노환희(2013)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는 세대는 386세대뿐이고, 그 이하의 세대는 진보적이면서도 일정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이상의 세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수화 되고 있다고 본다. 이내영(2013)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18대 대선에서 세대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다양한 연구고 있지만, 386세대를 제외한 세대에서는 등락이 있거나 연령에 따른 보수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당시 대선을 앞둔 시점의 언론보도를 보면 소위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사이의 대결로 비춰진 측면이 있다. 손병호(2012.11.25.)의 보도를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가 대응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대응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의 대결이라는 언급이 있다. 과학적인 검증은 어렵지만, 당시 대선을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사이의 대결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분석

총선과 지방선거는 대선에 비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기 어렵다. 한 번에 많은 선거구에서 많은 인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각 선거별로 다양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인 2표로 나누어진 점,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동시에 선출된다는 점에서 교차투표나 전략투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네 차례의 총선(17대~20대)과 네 차례의 지방선거(3회~6회)에 대한 분석은 (1) 대통령 선거로의 종속성, (2) 진보정당 지지에 있어서의 이념균열, (3) 소(小)지역주의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의 지역균열, (4) 선거제도와 선거구도 등의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들 선거의 특성을 이해할 것이다. 그 이후에 이런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세대균열을 이용한 양상을 살펴보자.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과 지방선거는 대선에 종속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대통령 임기 중반은 '중간 평가' 등의 성격이, 정권 교체기에는 '대선 전초전' 등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세 차례의 지방선거는 각 정부의 평가의 성격이 많이 반영되었다. 정권 출범 직후에 있던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은 각각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대선 직전에 있었던 19대 총선은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었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대선에 종속되면 일종의 정치균열 양상이 띠다.

대개 양자대결의 성격이 강한 대선과 달리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다양한 정당, 정파가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과 노동당 등에 이르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동기는 이념균열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⁴²⁾. 또,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다자구도에서 양자구도로 만들려는 정치적 동기도 이념균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진보정당의 지지율의 부침은 이런 이념균열의 적용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42) 17대 총선을 분석한 김형준(2004)에 따르면, 당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는 이념균열에 의해서 지지한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한다.

대선에서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듯, 총선인 지방선거에서도 지역균열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당선자 결과를 분석하면 지역균열이 약해졌음에도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⁴³⁾도 있고, 반대인 경우⁴⁴⁾도 존재한다. 또, 전국단위 선거인 대선과 달리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각 지역 내에 있는 소지역주의가 작동하는 등 지역균열이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선거제도와 선거구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17대 총선에 도입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의 1인 2표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지지정당을,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신과 가까운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전략투표 현상이 나타난다. [조진만(2006)], [한상익(2013)] 이런 전략적 투표는 20대 총선의 서울특별시 결과를 보면 잘 나타나는데, 지역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⁴⁵⁾하였지만 정당별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3위⁴⁶⁾에 그쳤다. 이 결과는 당시 야권 성향 지지자의 전략적 투표의 결과가 잘 나타난다.

위와 같이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에서 세대균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경우는 정당이나 정치적 엘리트가 직접적으로 특정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직접적 방식과 세대에 따라서 정치적 사건이나 정책에 대한 민감도나 반응의 차이로 나타나는 간접적 방식으로 나타난다.

정당이나 정치적 엘리트가 직접적으로 특정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사례는 17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장인 17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이른바 노년층 투표 관련 발언⁴⁷⁾[윤상철(2009)]이었다. 언론에서는 이 발언의 노년층에 대한 언급에 방점이 찍혔지만, 사실상 16대 대선부터 당시 여당에 대한 지지층인 청년층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측면이 있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볼 때, 당시 정당이나 정치 엘리트는 세대균열의 잠재성을 인지했음⁴⁸⁾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세대에 따라서 정치적 사건이나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세대 차이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제6회 지방선거(2006)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이나, 제5회 지방선거(2010)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도입한 것은 청년층이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간접적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3) 최다득표자가 승리하는 선거에서는 2위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더라도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즉,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석권하더라도 지지율 차이에 따른 지역균열은 시간에 따라 약화되어 보일 수 있다.

44) 공천 과정 등의 다양한 이유로 동일한 정파의 여러 정치인이 출마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서,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면 지역균열이 약해져 보이지만 후보의 정치 성향을 면밀히 검토하면 강해지기도 한다.

45) 서울특별시 전체 49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35석(71.4%) 차지하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12석, 국민의당은 2석을 차지하는 데에 그쳤다.

46) 서울특별시 정당별 비례대표 선거 정당별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득표율 순서)

△ 새누리당(30.8%), △ 국민의당(28.8%), △ 더불어민주당(25.93), △ 정의당(8.5%) 순서였다.

47) 이 발언은 17대 총선을 앞둔 2014년 03월 26일에 있었던 대구지경 언론사와의 오찬 간담회 이후에 국민일보 총선기자단과의 단독인터뷰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이다. 발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어르신들은 투표를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분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투표를 꼭 해야 합니다.” [이용훈(2014.04.01.)]

48) 이런 주장에 대한 분석은 최준영(2005)에 나와있다. 최준영(2005)는 16대, 17대 총선에서 동일한 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지역균열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단일균열 구조 관점에서의 비판

앞선 절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세대균열은 부수적 효과로 나타났다가 그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세대균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지역균열이 지역갈등을 야기했던 것처럼 세대균열이 세대갈등을 야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1) 지역갈등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 세대갈등 발생을 유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3) 단일균열 구조와 그 극복 양상을 알아볼 것이다.

(1) 지역갈등의 원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대표성을 띠면서 의정활동을 하므로, 지역현안을 중앙정치권에 반영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에는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같은 지역정당을 통한 지역자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⁴⁹⁾.

이런 점에서, 지역균열 양상은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을 잘 대변해주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투표하는 투표 전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이론으로 **합리적 선택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지역균열의 원인을 유권자의 합리성에서 찾는다. 즉, 합리적 선택론에서는 유권자는 주어진 대안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다고 본다. [최영진(1999)] **조기숙(1997)**은 이런 유권자 선택의 배경에는 ‘자신의 지역출신 대통령을 뽑아야 재화의 분배나 인사에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유권자의 계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영진(1999), 재인용]

이런 합리적 선택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한 가지는 합리적 선택론으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회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런 합리성의 이면에 있는 ‘유권자의 계산’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이다. 합리적 선택론이 설명력의 한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호남 지역주의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이다. 합리적 선택론을 옹호하는 **이갑윤(1998)**도 이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광주민중화운동’이라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영진(1999), 재인용]

영남권 유권자가 영남권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주요 국가시설을 영남권에 집중하는 후견주의(clientelism)적 전략을 채택[**성경룡(2015)**]하게 한 것은 일견 타당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략으로 인해 야기된 동서에 깊게 패인 지역균열⁵⁰⁾은 어떤 다른 쟁점도 거부하는 배타적 특성을 드러내며 한국정치의 파

49)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생활협동조합 가나가와’라는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출발하였다가,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대리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역정당의 형태로 변모하였다. 현재는 지역문제를 연구하는 개인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챌린지 기금’ 등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지역자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남규(2010.06.20.)]

50) 박정희 정권의 후견주의가 ‘현대적 의미의 지역주의’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결과 한국사회의 지역주의는 지역 사이의 관계를 ‘중심-주변부 차원’에서 정의하고, ‘지역패권주의’나 ‘내부 식민주의’의 양상이 나타난다. [김만홍(1994), 최장집(1996)] **최장집(1993)**은 이런 지역주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어, 인종, 종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정치적 배제와 소외감이 자아내는 지역대립의 깊이가 매우 깊다고 지적한다.

행을 심화시킨다는 점[최영진(1999)]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당내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대개 지역균열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⁵¹⁾, 지역균열이 후보의 공약이나 능력과 같은 다른 쟁점을 거부하는 배타적 특성이 나타난 경우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해당 지역의 후보자는 지역현안보다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한동안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의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의 공천권을 사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폐해[황수영(2015.09.14)]가 지적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합리적 선택론에 나타난 잘못된 '유권자 계산'은 투표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주된 투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난다.

합리적 선택론의 한계를 살펴보다 보면, 지역균열이 과열되는 이면에는 자신의 지역에서 강한 지역대표가 나온다면, 그 지역대표를 통해서 자신의 지역이 특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엘리트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균열과 같은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자원으로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이런 기대심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정치 실세'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선심성 사업을 국가 예산에 끼워 넣는 '쪽지예산 관행'[이동현(2015.12.05)]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치 관행은 유권자의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지역균열을 지역갈등으로 왜곡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엘리트는 지역균열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역감정을 조장함으로써 지역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김진하(2010)는 박정희 정권의 후견주의 사례와 같이 지역감정이 지역균열을 토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지역감정을 정치적 자원으로 이용하는 정치인은 선거 국면에 개입[손호철(1993)], [이갑윤(1998)]해서 지역감정을 적대적 갈등관계로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지역감정은 대개 '정서적 지역감정'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지역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2) 세대갈등의 원인

지역균열이 지역갈등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세대균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균열 자체가 지역현안을 의제로 제시하듯, 세대균열이 청년층의 취업문제나 노년층의 빈곤문제와 같은 각 세대의 주요 현안을 의제로 제시하는 순기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세대정책이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종속됨에 따라 세대갈등으로 변질되면, 지역균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대'가 주된 변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의 주요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제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제시하였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었다. 새누리당은 당시 자신의 정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년층을 겨냥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후 재정 문제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부안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고 지급액도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

51) 엄밀히 말하면, 지역균열과 정당균열이 결합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정당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등지급한다.’는 내용[이용욱(2013.09.22.)]으로 수정되었다. 이후 야권에서는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20만원조차도 최저생계비(64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됨에 따라 20만원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는 10명 중 4명도 안 된다[이정현(2016.03.09.)]고 비판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의 사례는 노년층의 빈곤문제와 같은 각 세대의 주요 현안을 의제로 제시하는 순기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세대정책은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종속됨에 따라 ‘세대’가 투표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이라는 노년층 세대의 주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지역갈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이나 정치 엘리트는 뚜렷한 세대균열이 없는 경우에도 각 세대의 이기주의를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세대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높이는 문제를 두고 나타난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갈등이다.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높이려고 하자, 정부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정부는 ‘보험료 두 배 인상’과 ‘미래세대 부담’과 같은 표현으로 이 문제를 세대갈등으로 비화하였다. [최성진(2015.05.10.)]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연금문제가 세대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으로 보고, 국민연금을 폐지한다면 오히려 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민영화로 노인빈곤이 가중된 칠레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칠레정부는 노인빈곤이 심화되자 결국 2008년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년 빈곤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⁵²⁾와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박종훈(2013)]

국민연금 문제는 과거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제로섬(zero sum) 게임**이란 이득의 총합이 항상 0인 게임으로 한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국민연금 문제를 세대갈등 구도로 만들려는 정치 집단은 사회 구성원에게 다른 세대가 이득을 취하는 것을 견제하거나, 선제적으로 이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문제는 제로섬 게임보다는 죄수의 딜레마에 가깝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대표적인 비(非)제로섬(non zero sum) 게임으로, 협력하면 가장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각 자의 욕심으로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죄수의 딜레마에 빚대어서, 국민연금 문제를 이해해보면 (1) 두 세대가 협력하는 경우, (2) 미래세대에게만 유리한 경우, (3) 과거세대에게만 유리한 경우, (4) 두 세대가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4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두 세대가 협력하지 못하는 (4)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민영화나 폐지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회가 모든 국민의 노후를 포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칠레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는 다른 세대가 노년빈곤 해결을 위한 부담을

52) 박종훈(2013)은 부가가치세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역진세’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소비활동이 왕성한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지게 될 것이다. 두 세대가 협력하는 (1)의 경우에는 각 세대가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정도를 적절하게 합의하는 경우로 스웨덴이 대표적인 예이다. 스웨덴의 경우 고령화가 가속화되자 기성세대에서부터 연금체계 개혁을 주장했고[박종훈(2013)], 10년에 가까운 국민연금개혁 논의 끝에 1998년 ‘명목 확정기여’형 연금제도⁵³⁾가 나타났다. 스웨덴 사례가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 없지만⁵⁴⁾,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회구성원이 논의한 점[박종훈(2013)]은 눈여겨 볼만하다.

어느 세대가 유리한 (2)와 (3)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일반적인 죄수의 딜레마와 동일한 양상을 띠지만, 장기적으로는 순망치한(唇亡齒寒)으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미래세대만 유리하면, 과거세대의 빈곤문제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고, 과거세대만 유리하면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이탈하거나 과거세대의 생산성 저하로 국민연금이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두 세대가 협력하는 (1)을 선택하느냐, 그 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체 파이(pie)의 크기가 달라지는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 나타난다.

(3) 단일균열 구조 양상과 극복 가능성

A나라의 소비자는 컴퓨터를 사는 과정에서 가격만 본다. 그래서 기업은 성능이나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결국 지역별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만 살아남게 되었고, 그 살아남은 기업은 독점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더 이상 가격을 보지 않고 성능만 보고 컴퓨터를 구매했다. 그러자 기업은 가격이나 디자인은 쓰지 않고 가능한 성능만 좋은 컴퓨터를 만들게 된다. 결국 소비자는 성능만 좋고 디자인은 볼품없고 높은 가격의 제품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A나라 사람들의 컴퓨터 소비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A나라 사람이 컴퓨터를 사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례이다. A나라 사람들이 컴퓨터를 살 때, 가격만 보거나 성능만 보는 것과 같이, 사회 구성원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만 고려하거나 세대만 고려하는 사회를 단일균열구조라고 부른다.

단일균열 구조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한국사회에서 세대균열이나 지역균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회적 균열의 논의를 배제할 정도로 특정 균열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즉, 가격이나 성능을 기준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가격만 보거나 성능만 보면서 다른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느 정도의 지역균열은 지역에 따른 현실적 차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다양

53)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NDC). 개인 생애소득의 18.5%를 연금 보험료로 내되, 그중 16%p는 각자의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비례연금에 들어가고, 2.5%p는 각 개인이 800개의 펀드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비례연금의 경우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기금으로 적립되는 한국과 달리 현재 노령자에게 바로 지급되고 자신의 연금계좌에는 가상의 적립금이 쌓이게 된다. 경제성장률과 인구전망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후 노후연금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박종훈(2013)]

54) 한국의 경우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고, 그런 이유로 스웨덴의 경우에는 최저보장 연금액이 보장되어 있다. [박종훈(2013)] 박종훈(2013)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세대가 공존하는 한국사회⁵⁵⁾에서는 각 세대의 주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다.

정진민(2002)에 의하면, 민주화 이후에 13대 대선(1987)과 13대 총선(1988)을 통해 지역주의 정당체제로 정착하면서, 정당 사이의 경쟁구도가 지역균열이라는 단일균열 구조의 틀 속에 포획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후에는 정당들이 지역균열 이외의 쟁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개발할 유인이 적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사회의 사회적 균열이 지역균열이나 세대균열 하나라 정해지게 되면, 정치인은 그 이외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과거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단일균열 구조가 희석되는 사례를 통해서, 단일균열 구조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국면에서 이른바 ‘북풍(北風)’에 의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 북풍이란 남북분단 상황에서 나타난 이념균열의 또 다른 이름으로, 선거 국면에서 정권이나 언론이 북한관련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보수 진영이 사회구성원에게 안보불안을 조성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15대 총선(1996년)의 ‘판문점 북풍사건’[김종대(2012)]이나 18대 총선(2008년)을 사흘 앞두고 북한이 로켓 ‘광명성 3호’를 공개한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진보 진영의 경우에도 16대 총선(2000년)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북풍을 이용했다. [김상수(2016.02.11.)]

하지만 이런 북풍은 제5회 지방선거(2010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강원택(2010)은 제5회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발표가 과거의 북풍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천안함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비춰지면서 순수성을 의심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안보 이슈가 부각되지 못하자, 당시 유권자가 원하는 실생활과 관련된 양극화 해소, 경제성장, 국민통합 이슈에서 정부와 여당이 상대적으로 밀리게 된다.

북풍이란 유권자의 바람과 상관없이, 정당이나 정치 엘리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만 들어지는 이념균열 형태의 사회적 균열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5회 지방선거에서 북풍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무리 정당이나 정치 엘리트에 의해 균열이 만들어지더라도 유권자 인식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5)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각 연령층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이다)

△10대(15세 이상, 8.6%), △20대(16.40%), △30대(19.39%),
△40대(20.41%), △50대(16.33%), △60대(9.94%), △70대(6.59%)

IV. 세대균열 구도에 대한 비판

1) 일상 속의 세대주의 관찰

이번 절에서는 세대균열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세대주의가 한국사회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세대주의(世代主義, Generationalistic Tendency)**는 영국의 정치학자 화이트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면 이해하기 좋다. 세대주의란 정치인, 언론인, 대중적 지식인들이 세대범주의 중심성(centrality)을 주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다른 개념을 제쳐두고, 세대의 개념으로 풀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김선기(2014)] 가령,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는 세대뿐만 아니라 계급, 지역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세대주의의 관점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사실상 세대의 문제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정치권, 언론, 학계에 의해서 일반 대중으로 세대주의를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이 존재한다. 이들 과정은 일종의 양성 피드백(positive feedback) 과정의 양상을 띤다. 정치권에서 세대균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언론은 그런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런 사회적 흐름이 계속되면 학계에서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 양상이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세대주의가 (1) 정치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2) 언론사에 의해 증폭이 된 후에, (3) 학계에 의해 정교화 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1) 정치권에 의해 제작된 세대주의

정치권에서는 ‘세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한다. 3장에서 알아보았지만, 세대균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대균열을 이용하는 것이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만드는 세대주의도 (1) 정당 안에서 나타나는 세대주의 양상, (2) 정당이나 정치 엘리트가 유권자에게 세대균열을 유도하는 양상이 있다.

먼저, 정당 안에서의 세대주의 양상을 살펴보자. 신진 정치인이나 젊은 정치인이 기성 정치인과의 선명성을 내세우기 위해 이른바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경우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성유보(2014.02.18.)]에서 신민당의 후보 지명전에서 나타난 ‘40대 기수론’과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김경환(1997)]에서 신한국당 당내경선에서 나타난 ‘젊은 이인제 열풍’ 대표적인 경우이다.

7대 대선 신민당 후보지명전에서 김영삼 의원(당시 41세)은 과거 야당이 나이 많은 후보를 지명한 점을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활기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40대 기수’에게 리더십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의원(당시 45세)과 이철승 의원(당시 48세)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40대 기수들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15대 대선 신한국당 후보지명전은 대세론에 힘입은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낙승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그 해 3월 24일 대선출마 선언을 한 이인제 후보(당시 49세)는 TV토론 이후에는 이회창 총재의 대세론에 위협이 되는 후보로 주목을 받았다. 이인제 후보는 1차 투표를 통과해서 결선투표에서 40.0%라는 득표를 보이는 저력을 보였다.

이들 사건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40대 기수론’이나 ‘젊은 이인제 열풍’이 처음

시작될 때, 기성 정치인은 구상유취(口尙乳臭)로 일축하였지만, 이들의 세대교체론은 상당 부분효과를 보았다. 7대 대선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민당 후보로 선출된 김대중 후보는 45.2%라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⁵⁶⁾, 제15대 대선의 경우에는 이인제 후보가 경선을 불복하고 나온 대선 본선에서 19.2%의 지지를 받았다⁵⁷⁾.

정치권의 정당 내부에서 나타나는 세대교체론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선명성과 참신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왔고, 언론에서는 이런 세대교체론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⁵⁸⁾. 세대교체론은 기존 세력과 세력 사이에서 나타나는 적절한 견제가 정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대교체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진 정치인이나 젊은 정치인이 반드시 선명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초선비율이 44.0%(132명)으로 16대 이후 최소라는 평가를 받았다⁵⁹⁾. [임형섭(2016.04.14.)] 이 평가는 다른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40~60%를 꾸준히 교체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정치에서 세대교체론은 비교적 일상적이기 때문에 선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선명성이란 단순히 정치를 새로 입문하는 것의 의미보다는 다른 정치인이 보지 못하는 현실인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정당 안의 세대주의는 정당 밖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극적으로는 단순히 특정 세대를 대표자로 내세워서(청년 비례대표제도), 해당 세대의 지지를 얻어내는 세대균열을 유도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적극적으로는 특정 정책(청년 고용할당제, 임금 피크제 등)에 있어서 세대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최근 젊은 정치인이 청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근거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을 공천하는 ‘청년 비례대표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애초 취지에서 멀어지고, 검증 부족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이 ‘깜짝 효과’를 노리고 준비가 안 된 청년을 끌어들이었다는 비판⁶⁰⁾이 있다. 이에 대해, 청년 당원이 활동하는 정치토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도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검증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개인 자질 문제를 제도 자체의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⁶¹⁾이 부딪히고 있다. [임형섭(2016.06.15.)]

젊은 정치인이 청년 문제를 잘 이해한다는 옹호론이나 젊은 정치인이 경험이 부족해서 공천하기 부적합하다는 비판론이나 세대주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청년이 직면한 현실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

56) 박정희 후보의 지지율은 53.2%로, 불과 8.0% 차이였다.

57) 선거 중반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인제 후보가 21.9%로, 이회창 후보(10.6%)를 두 배 넘게 앞서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인(1997.10.27.)]

58) 대표적인 예로, 젊은 대권주자 행보에 대해서 언론의 시각이다. [허남철(2016.07.17.)]

59) 국회의원 초선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임형섭(2016.04.14.)]

△ 16대(40.7%) △ 17대(62.5%) △ 18대(44.8%) △ 19대(49.3%) △ 20대(44.0%)

60) 임형섭(2016.06.15.)의 취재에서 신울 교수(명지대학교)는 “세대별로 대표를 할당해 뽑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자 정치적 쇼”라며 “청년 비례대표를 둔다고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주장하였다.

61) 전자는 신보라 의원(20대, 새누리당)의 주장이고, 후자는 김광진 전 의원(19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절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지역 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현안을 잘 이해한다고 보는 지역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젊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식견이 부족하다는 점도 세대주의의로 볼 수 있는데, 연령과 피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정⁶²⁾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정 세대의 정책을 그 세대의 정치인만이 잘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피선거권이 없는 아동의 인권이나 학생 인권⁶³⁾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지역 노인문제를 단순히 지역출신 정치인에 맡기자는 논리보다는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정치인에게 맡기자는 논리가 적절하듯, 청년문제를 단순히 청년 정치인에 맡기자는 논리가 적절해 보인다.

조현연(2016)은 박근혜 정부가 ‘두 국민⁶⁴⁾ 전략(Two nations strategy)⁶⁵⁾’을 이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국민 전략은 상대방 열성 지지자의 분노를 자극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시킴으로써 그런 세력을 ‘시끄러운 소수’로 낙인찍음으로써 보수 우위의 헤게모니를 재편하는 데⁶⁶⁾에 이용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의 ‘두 국민 전략’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측면이 있다. 보육정책에서는 외벌이 가정과 맞벌이 가정 사이의 대결로 만든 점, 노동개혁에서는 연금개혁이나 임금 피크제를 청년실업과 연계해서 ‘세대 사이 일자리 갈등’으로 만든 점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 사이 도적질’이라는 선동으로 노년층을 도적으로 몰아가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년실업은 기성세대 책임’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의도적으로 세대 사이 갈등을 조장하였다.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임금 피크제(salary peak)에 대해⁶⁷⁾ 반대하는 세력을 청년실업을 외면하는 세력으로 몰아갔다. [조현연(2016)] 조현연(2016)은 이런 세대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권의 행위는 ‘갈등의 사유화(privatization of conflict)⁶⁸⁾’이자 일종의 ‘갈등의 전치(displacement)’ 전략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세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유권자 사이에 지나친 세대균열을 야기하기도 한다.

62) 선출직 공직자의 연령과 관련된 사항은 1994년 3월 4일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

△ 대통령(40세) △ 국회의원(25세) △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25세)

63) 피선거권이 없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경우로 한정한다.

64) 영국 국민이 ‘두 국민’으로 분열되어 있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시작은 벤자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가 영국 총리 재임 시(1874~1880)였고,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1980년대 대처 행정부가 나타났을 때 다시 부상했다. [조현연(2016)]

65) 제소프(Bob Jessop)이 국민을 두 부류로 나누어, 정권에 우호적인 국민에게 당근을, 그렇지 않은 국민에게 채찍을 사용해서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통치에 적극 이용하는 분할 통치 방법이다. [조현연(2016)]

66)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당시 각각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을 ‘시끄러운 소수’로 낙인 찍었다. [조현연(2016)]

67) 이정원(2015)에 의하면, 임금 피크제가 신규 고용을 늘리기보다 퇴직 노동자의 인원에 비례하여 채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금 피크제가 결과적으로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현장 사례로 입증하였다. [조현연(2016)]

68) 샷츠슈나이더(2008)가 정당과 정치 엘리트는 한 사회의 지배적 사회갈등을 배제하고 선거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갈등만을 선택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관찰하고 명명한 것이다.

(2) 언론에 의해 증폭되는 세대주의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세대주의는 언론사를 통해서 그 양상이 더 강화된다. 굳이 세대 갈등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도 언론사는 은연중에 각 세대에 대한 이미지를 꾸준히 생산하고 배포해왔다. 가령, 보도에서 익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 ○성’와 같이 연령과 성별로 보도하는 모습은 특정 연령과 성별에 대한 편견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통념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화제성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언론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홍영란(2015)은 정치부분과 경제부분의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정치부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세대별로 장년층은 보수 성향을, 청년층은 진보 성향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분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년연장, 임금 피크제도,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등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보도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연령효과 등에 의해서 세대에 따른 정치적 견해에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른 경제적 수준에도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개연성으로 인해서 특정 세대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갖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일종의 세대주의라고 볼 수 있다. 또,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서 특정 정책에 대한 바람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런 바람이 다른 세대에 대한 경쟁 심리로 반드시 작용하지 않는다.

언론은 세대별 투표율에 따른 해석을 꾸준히 제시하는 것도 문제시 될 수 있다. 20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의 증가에 대해서 보수언론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이었다[신진우(2016.07.06.)]이었다고 보는 반면에, 진보언론은 그럼에도 투표자가 많은 노년층이 결정했다[김남일(2016.07.04.)]고 보았다. 이런 분석은 연령효과에 따라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서 보수적이라는 시각을 전제하는데, 이런 시각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2016년 7월 10일에 있었던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세대에 따른 지지율⁶⁹⁾을 살펴보면 세대에 따른 큰 차이는 없지만, 보수 성향의 연립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청년층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진보 성향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노년층이 오히려 높게 나왔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팀(2016.07.11.)]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17대 대선에서 나타났는데⁷⁰⁾, 당시 보수 성향 후보가 모든 세대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았으며, 진보 성향 후보는 20대에서 가장 적은 지지를 받았다⁷¹⁾. 당시 이남영(2007.12.12.)은 젊

69) 보수 성향의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의 지지율과 진보 성향의 야당(민진당+공산당)의 세대별 지지율은 다음과 같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팀(2016.07.11.)]

△ 18, 19세(50% : 25%) △ 20대(52% : 23%) △ 30대(49% : 24%) △ 40대(47% : 28%)

△ 50대(46% : 31%) △ 60대(43% : 35%) △ 70대 이상(44% : 32%) (△세대(여당지지 : 야당지지))

70) 보수 성향 후보(이명박 후보+이회창 후보)의 지지율과 진보 성향 후보(정동영 후보+권영길 후보)의 세대별 지지율은 다음과 같다. [조흥민(2007.12.20.)]

△ 20대(58.2% : 24.2%) △ 30대(54.4% : 34.4%) △ 40대(63.9% : 30.4%)

△ 50대(71.9% : 25.2%) △ 60대(71.9% : 25.9%) (△세대(보수 성향 후보 지지 : 진보 성향 후보 지지))

71) 아울러 당시 보수 성향인 이회창 후보는 20대(15.7%)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당시 이회창 후보의 세대별 지지율은 다음과 같다. [조흥민(2007.12.20.)]

△ 20대(15.7%) △ 30대(14.0%) △ 40대(13.3%) △ 50대(13.4%) △ 60대(13.1%)

은 세대가 진보 세력을 더 이상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젊은 세대의 탈(脫)이념화를 방증하는 결과로 보기도 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동일한 시점의 다른 지역의 선거, 동일한 지역의 다른 시점의 선거를 통해서 세대와 이념성향의 상관관계를 선부르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설령 세대와 이념성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성향의 20대와 진보성향의 20대가 투표할 확률이 동일하지 않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도 비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언론 보도는 (1) 세대와 이념성향 사이의 상관관계가 고정적이라는 주장, (2) 특정 세대가 선거 결과를 결정 지었다고 보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이 두 지점은 세대주의 관점에서 비판될 여지가 있다. 전자는 세대에 따른 이념성향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고정적이라는 인식을 준다. 반면, 후자는 각 유권자의 개별 선택에 대해서 ‘세대를 위한’ 선택으로 곡해(曲解)하고 있다⁷²⁾. 나아가, 각 세대의 투표율이 각 세대의 권력으로 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즉, 언론 보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세대 안의 연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을 존재하는 양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3) 학계에 의해 정교화 되는 세대주의

생물학자는 분화능력(potency)을 갖는 줄기세포(stem cell)를 어떻게 분화시킬지에 관심을 가지지, 이미 분화가 끝난 세포를 어떻게 분화를 시킬지 고민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당이나 정치엘리트는 아직 미분화 단계에 있는 청년층⁷³⁾을 자신을 지지하는 세대로 만드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는 이런 정치권의 동기가 학계에 의해서 어떻게 정교화 되는지 알아보자.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의 저명인사에 의해서 자기계발 담론과 힐링 담론이 유행한 적이 있다. 자기계발 담론은 성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한국사회가 저성장 상태가 되자,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조⁷⁴⁾하는 저개발 상태의 담론이 부활한 것이다. 자기계발 담론과 힐링 담론은 ‘독설’과 ‘힐링’이라는 두 가지 얼굴로 청년층에게 다가갔다. 특히, 자기계발 담론 중에서 김미경 강사의 ‘독설’에 대해서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는 성공을 강조하는 산업화 초기의 자기계발 담론을 닮았다고 비판하였다. [정원식(2013.03.30.)]

사회구성원이 직면한 문제를 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자기계발 담론에 대해서 88만원 세대 담론은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우석훈(2007)**은 한국사회의 88만원 세대⁷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 수준의 저항은

72) 거시적 현상만 가지고, 미시적 수준의 현상을 곡해하는 오류 논증이다. 비슷한 사례로, 많은 사회 구성원이 근검절약 정신으로 저축을 많이 해서 경기침체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만 보고 각 사회 구성원이 경기침체를 유발하기 위해 저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73)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세대의식이 없다면 ‘세대’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의상 청년층이라는 표현을 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20대나 30대를 말한다.

74) **김민섭(2016.06.19.)**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조를 예로 들면서, 자기계발 담론의 원형을 ‘국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시체를 계발하는 개인의 모습’에서 찾았다.

동76)이지 각자의 자기계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자기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88만원 세대 담론 역시 **신광영(2009)**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라기보다 계급과 전체 세대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타일지수(Theil Index)를 바탕으로 세대 사이의 불평등은 오히려 약화되고, 세대 안의 불평등은 심화77)되어서 전체적인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78).

자기계발 담론과 88만원 세대 담론이 단순히 ‘청년층을 어떤 세대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전상진(2010)**은 88만원 세대 담론의 경우에 청년층으로 하여금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세대 사이의 불균등한 분배 때문인 것으로 보고, 나아가 다른 세대와의 경쟁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다른 세대에 대한 반감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두 국민 전략’과 같은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 세대주의 관점 비판

앞선 절에서 정치권, 언론, 학계에 의해서 세대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이런 (1) 세대주의가 왜 비민주적인지 알아보고, (2) 세대주의에 대한 주장의 허구성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나타난 일련의 사례를 통해서 (3) 한국사회 구성원은 세대주의를 넘어서는 다양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1) 세대주의의 비민주성

세대주의가 문제인 것은 세대주의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개념들과 어긋나거나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김선기(2014)]** 가령, 특정한 출생 코호트를 세대로 명명하고 그 세대 안의 공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세대 안의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즉, 세대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세대주의가 강화되면, 그 분석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다양성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화이트(White, 2013)**는 세대 안의 공통성에 대한 강조는 그 공통성에서 이탈한 자들의 경험들을 주변화하고, 나아가 그런 구성원을 잠재적으로 억압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본다. **[김선기(2014)]**

한국사회에서도 이런 세대주의에 의한 억압은 강석경의 소설 「숲 속의 방」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1980년대의 대학생 ‘소양’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소설은, 당시 대학생들이 운동권이나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한 부류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최명민(2010)]**을 보여준다. 작가는 작가노트**[강석경(1987)]**를 통해, 이런 상황으로부터 정

75) 당시 20대는 상위 5%만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하면 88만 원정도 나온다는 계산이다. **[우석훈(2007)]**

76) 원문은 ‘그들만의 바리케이드와, 그들이 한 발이라도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짱돌’이다.

77) **신광영(2009)**은 이 이유를 계급에 따른 소득격차가 연령 증가와 함께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78) **오찬호(2010)**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들면서 비판을 했다. 사회적 연대 수준의 저항운동이 가능하려면 각 사회 구성원이 문제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같은 저자의 **오찬호(2013)**에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신적 유산은 없이 물질적 안락에만 만족하는 가정(기성층), 극렬한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학교(청년층), 어디서도 동질감을 찾지 못하고 힘겹게 진실 찾기를 하는 소양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재검토해보고 싶었다고 밝히고 싶었다고 한다. 힘겨운 진실 찾기는 ‘방황은 청춘의 특권이 아니라 형벌인 것이다.’라는 문장 하나로 그 어려움이 여실히 들어나며, 이 어려움을 넓게 해석하면 세대 안의 공통성에서 이탈한 자가 주변화 되고 억압받을 때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는 세대주의가 이분법적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그 고통이 배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즉, 세대 안의 공통성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와 대립각에 있는 세대로 강제로 편입되는 양상이다. 이런 양상은 한국사회가 해방 이후 극심한 이념갈등에서 나타난 이념양상에서의 이분법의 잔상이 세대주의와 결합하면서, 세대주의의 비민주성 정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세대주의의 허구성

정치권에서 만들어지는 세대에 대한 ‘두 국민 전략’은 세대 안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세대 사이의 경쟁을 유발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은 세대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각 세대를 얼마나 지원하느냐의 문제이다. **신현준(2008)**은 노인복지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아동복지의 상대적 박탈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는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서 나머지 항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성 선택(79)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적 검증으로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사이의 상쇄현상과 아동빈곤은 상관관계는 없다는 것을 보였다. 즉, 특정 세대의 빈곤은 다른 세대에 대한 복지수준과 무관하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세대 사이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세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신광영(2009)]** 예컨대, 저소득 청년이 월세로 사는 비율이 부유한 고소득 청년에 비해 3배라는 **[황보연(2016.03.24.)]** 사실로, 장년층에게 퇴직 후 재취업 준비가 필수라는 **[김희리(2016.08.03.)]** 사실로, 노년층 중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빈곤하며 **[최찬홍(2016.08.07.)]**,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최경환(2016.07.21.)]** 사실로, 은퇴 후의 재취업은 사실상 일상화 되고 있는 **[매일경제 디지털뉴스국(2016.08.06.)]**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명호(2009)는 대표적인 정치적 세대인 386세대 역시 분화하고 있다는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 386세대는 18대 총선에서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서 분화되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달리 대미 동맹 강화론 등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고,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세대 안의 공통성이 가장 견

79) **Berry(1990)**는 예산 결정과정은 대개 배정된 항목이 정해져있고, 할당될 재원이 무한정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예산결정과정 초기에 정해진다고 보았다. 이 예산 결정과정에는 연속성 선택과 동시성 선택이 있는데, **연속성 선택**은 특정 예산항목의 총액이 정해지면 나머지 예산액이 다른 항목에 배정되는 것을 말하고, **동시성 선택**은 총 예산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각 하부 항목의 예산액이 동시에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신현준(2008)]**

80) **연속성 선택**은 특정 예산항목의 총액이 정해지면 나머지 예산액이 다른 항목에 배정되는 것을 말하고, **동시성 선택**은 총 예산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각 하부 항목의 예산액이 동시에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신현준(2008)]**

고해 보이던 386세대 안의 공통성도 가변적인 측면이 있다.

학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계발 담론이나 88만원 세대 담론은 문제 상황에 직면한 청년층에게 개인적 차원으로 극복하는 세대가 될 것인지, 사회적 연대 차원으로 극복하는 세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은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굳이 세대 안의 연대에만 연연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굳이 개인적 차원의 해결만 고집하지 않는다. 자신⁸¹⁾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고민한다면 세대를 불문하고 연대⁸²⁾하는 새로운 답⁸³⁾으로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3) 세대주의에 대한 반대흐름

청년층⁸⁴⁾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1)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2) 이화여자대학교 미래라이프 유치 반대 활동, (3)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연대, (4) 지하철 구의역 사고 추모 운동 등의 사회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2013년 12월 10일에 당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주현우 학생이 쓴 대자보에서 시작되었다. 철도 민영화, 밀양 주민 자살 등의 사회문제와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청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대자보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386세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시각[박훈상(2014.02.12.)]이 있었지만, 대자보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답변[김여란(2013.12.12.)] 형식의 대자보가 붙기도 하고, 비판적인 시각[김민석(2013.12.13.)]의 답변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당시 장기화된 철도 민영화 파업과 연동되어 사회참여운동의 뇌관이 된다는 우려[정혁수(2013.12.15.)]도 있었지만, 청년층의 사회 참여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안녕들 하십니까?’는 청년층의 답이 있다는 점, 하지만 그게 단일한 답이 아니라 다양한 답으로 구성됨을 보여 준다.

2016년 7월 28일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작된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반대 시위(이하 ‘이대 시위’)⁸⁵⁾는 청년층의 대한 하나의 답이 될 것이다. 이대 시위의 성공 요인을 ‘달

81) 이런 정체성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 **전상진(2010)**은 P세대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P세대는 프랑스의 불안정한 세대(génération précaire)에서 유래한 불안정 고용의 의미와 대졸자 인턴제(Praktikum)의 의미에서 유래했다.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세대 사이의 갈등으로 보지 않고, 노동사회 위기, 불안정한 고용관행 등의 문제로 본다.

82) **Busch(2010)**은 P세대는 자신들만이 불안정성의 피해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진정한 가해자는 윗세대나 기존 제도가 아니라 불안정성을 악용하는 기업에 있다고 본다. 세대 사이 협업과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며, 저항 방식에 있어서도 비폭력적이며 창의적 수단을 이용한다.

83) **Kasper Maase(2005)**는 최근 청년층의 세대형성 기제를 탈영웅적 세대(postheroische Generation)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탈(脫)영웅적이라는 말은 탈(脫)정치화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워졌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84) 반드시 청년층의 ‘답’을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세대 안 연대보다 세대 사이 연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에 어느 연령층으로 해도 무관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청년층의 ‘답’을 볼 것이다.

85) 이대 시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작은 7월 28일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평의회 회의가 열리는 날에 시작되었다. 이 날, 재학생과 졸업생 400명이 대학 본관에 모여서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신동진·강해령(2016.08.01.)] 그로부터 사흘째인 30일, 경찰 1,600명이 학내에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졸업생이 대거 가세하게 된다. 결국 8월 3일 학교본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된다. [천관울(2016.08.13.)]

팽이 민주주의'에서 찾는데, 이대 시위에는 이전의 시위와 달리 몇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무(無)대표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익명의 개인이 모였다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노력한다. 익명성이지만 각 개인의 의견은 존중되며 공식 입장은 각 개인의 끊임없는 토론으로 결론이 얻어 진다⁸⁶⁾. 또, 폭력을 이용하거나 외부세력의 도움을 받기보다⁸⁷⁾ '일상 같은 시위'⁸⁸⁾로 학교 본부를 긴 시간동안 압박하였다. [신한슬(2016.08.13.)] 이대 시위는 과거 시위와 형태는 다르지만⁸⁹⁾, 청년층이 자신에 주어진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1년 새해 첫날,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는 집단해고를 당한다. 집단해고는 청년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년 노동자도 고용 불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지연(2011.01.05.)] 고용 불안정이 모든 세대로 퍼진 가운데, 청소노동자를 지지하는 학생 행동 모임 '데굴데굴'은 퍼포먼스, 길거리 행진, 떡국 끓이기, 지도 그리기 등 다양한 행동이 이루어졌다. [오현경(2011.02.11.)] '데굴데굴'의 모습은 타자(他者)화 될 수 있는 다른 세대의 빈곤에 공감하고, 세대 사이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⁹⁰⁾을 보여준다.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 군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영 책임자인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은성PSD로 외주화 과정에서, 안전 대책이 미흡해진 것으로 지적[전종휘(2016.06.01.)]된다. 간접고용으로 요약되는 이런 고용관행은 이 사건으로 희생된 '김 군'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로 일반화된다. 이런 일반화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고 장소에 모인 추모인파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위령제에 나타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라는 문구로 집중된다. [박광연(2016.08.26.)]

이런 일련의 사회 현상을 살펴보면, 청년층을 넘어 한국사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회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에 세대 사이의 경쟁보다는 세대 사이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사회 전체의 연대보다는 사안, 사안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

86) 이런 이유로 언론과의 개별 인터뷰는 자제되었다. 개인의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확대되거나 외부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신한슬(2016.08.13.)]

87) 여기에는 학교 학생회, 정당뿐만 아니라 특정 성 지향 커뮤니티도 포함되었다.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의 참여가 자제되었다.

88) 독특한 시위 방식은 '농성장의 아지트화'이자, '일상 같은 시위'였다. 접거 농성 장소인 본관에는 생활용품, 학용품이나 보드게임 등 일상에 필요한 물건이 준비되었다. 밤샘 시위를 위해서 수면실도 만들어지고, 시위 도중에 독서, 졸업생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신한슬(2016.08.13.)]

89) 국가를 비판할 자유, 정부를 합법적으로 교체하는 데 적용되는 상세한 법규 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행사하기에 앞서 이들 방법이 모두 사용되었고 다른 방법이 전혀 남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폭력행사에 대한 대중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해롤드(1983)/유시민(2011) 재인용] 이런 점에서, 현실적 상황이 변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과거와 다른 방식의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90) 다만, 청년층이 다양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모든 청년층이 '데굴데굴'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홍익대학교 안에서도 청소노동자의 시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도 있었다.

V. 나오며 - 세대균열과 세대주의를 넘어서

많은 사회학 연구가 익숙한 일상에 물음표를 찍으면서 시작하듯, 이번 연구도 ‘청년 수당’에 대한 두 관계기관의 논란의 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으면서(1장) 시작하였다. 이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정치권이 만드는 세대균열이 만들어진 연유(緣由)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거에 나타난 세대균열의 양상(3장)을 관찰하였고, 그런 세대균열이 심화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권, 언론, 학계가 만드는 세대주의 양상(4장)을 관찰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대연구에 필요한 개념을 소개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2장)하기도 하였다.

3장과 4장에서 한국사회에 나타난 단일균열 구조와 세대주의 양상을 관찰하면서, 그에 반(反)하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장에서 지역균열로부터 세대균열로의 이행과정은 단일균열 구조가 또 다른 단일균열 구조가 될 수도 있지만, 다중균열 구조로 개선될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또, 북풍의 사례는 정당이나 정치엘리트에 의해서 사회적 균열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결코 수동적인 존재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4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회적 현상은 세대주의를 유도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은 그와 무관하게 세대 사이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반대 흐름에도 불구하고, 세대 사이 갈등에 대한 여러 징조가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출생 코호트의 차이는 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 차이는 한국현대사를 다루는 영화 <국제시장>, 영화 <변호인>, 영화 <연평해전>, 영화 <인천상륙작전> 등이 개봉할 때마다 세대에 따른 다른 해석으로 나타나는 갈등 양상으로부터, 한국사회의 ‘동시대(同時代)의 비동시대성(非同時代性)’⁹¹⁾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출생 코호트로 인해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세계를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다양한 출생 코호트가 공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출생 코호트가 다른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것은 각 세대 사이의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도한다는 점[홍기현(2002.12.16.)]과 서로 다른 세대가 만드는 다양성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2015년에 개봉한 낸시 마이어스(Nancy Meyers)의 영화 <인턴>은 젊은 CEO와 노년 인턴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세대⁹²⁾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영화에서 표현된 상황의 특수성⁹³⁾으로 인해 그 자체가 세대 사이 갈등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 다만, 다양한 세대의 공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한 사실로 보인다.

91) Ungleichzeitigkeit der Gleichzeitigen. Sackman(1992)에 의하면 세대들의 현재적 상호작용에서 ‘시간에 따라 분화된 사회의 존재’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전상진(2004)]

92)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동일한 세대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영화의 ‘일터’로 나오는 공간적 배경이 과거에는 노년인턴이 활약했던 전화번호부 인쇄소였다가, 현재는 젊은 CEO의 일터로 변하는 과정을 일종의 ‘코호트’가 변하는 과정을 형상화했다고 해석했다.

93) 영화가 형상화하는 상황은 어디까지나 ‘어떤’ 모습이지, ‘모든’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노년 인턴이 영화에 묘사되는 것과 같이 능력이 우수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3장에 나타난 단일균열 구조와 4장에 나타난 세대주의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생각해 보자. 단일균열 구조는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정치제도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세대주의는 세대 안의 공통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저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개선과 사회 구성원의 저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자.

단일균열 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균열이나 세대균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지역균열이나 세대균열은 지역문제나 세대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 한 종류의 사회적 균열이 다른 균열을 배제할 정도로 과열되는 경우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 범위를 늘려야 한다.

총선은 대선에 비해서 다양한 균열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이념균열이, 20대 총선에서 야권 지지자의 전략투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구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냈다. 이와 같이, 17대 총선 이후부터 도입된 의회 선거에서의 1인 2표제는 정치에서 유권자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유권자의 다양성이 반영되면서 정치권은 더 이상 특정한 균열 양상에만 기대기가 어려워졌다⁹⁴). 선거 제도의 차이가 사회적 균열의 양상을 바꾸어 놓는다.

이런 점에서 결선투표제나 석패율제⁹⁵) 등 선거제도 개선이 단일균열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제의 경우에는 예비투표가 특정 사회적 균열이 선거 구도를 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석패율제는 지역균열이나, 세대균열로 단일균열 구조가 형성된 선거구도에 새로운 균열구조를 만드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균열이 공존하고, 기존 정치인이 기존의 단일균열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일부 소신 있는 정치인에 의해서 일정부분 해소된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일균열 구조가 유리한 선거구도가 되는 '결선투표 없는 소선거구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뿐만 아니라 유권자 의식도 중요하다. 3장에서 정치권이 북풍이라 불리는 이념균열 사용을 안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유권자가 그런 북풍에 동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의 완화의 결정적인 역할은 더 이상 유권자의 투표 형태가 지역균열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유권자에 의해 정계개편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는 1945년에 있었던 영국 총선이다. 1945년 7월 5일 총선으로 영국의 정당 구조는 자유당의 몰락과 함께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구도⁹⁶)로 가게 된다. 이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당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전시 내각을 성공적으로 이끈 보수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점과, 다른 한 가지는 총선의 결과가 경제

94) 가령, 지역구 선거만 있는 경우에는 군소 정당에 대한 지지자가 정단 균열보다는 이념 균열에 의해서 가까운 정당에 지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1인 2표제가 있는 비례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군소 정당 지지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95)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이 허용된다. 만약 지역구에서 당선자와 적은 득표차이로 낙선한 경우 비례대표 제도로 구제하는 제도이다.

96) 당시 노동당이 393석, 보수당이 197석을 확보한 반면에, 자유당은 22석에 그쳤다.

학자 베버리지(William H. Beveridge)에 의해 제안된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이행 의지 정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말로 유명한데,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원오(2010)] 베버리지 보고서는 유권자에게 복지국가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유권자의 호응은 정치권에게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강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세대정책에 대한 문제가 세대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사이 갈등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델이 절실하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국가가 개인의 일생을 책임지는 모델을 넘어서, 국가가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개인의 일생을 책임지는 모델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 사이의 복지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죄수의 딜레마 형식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세대 사이의 복지 문제에 대한 세대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상시적인 논의기구인 가칭 ‘세대정책조정위원회’를 제안해 본다. 세대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이가 작아지는’ 선택을 지양하고, 각 세대 사이의 협력을 통해 ‘파이가 커지는’ 선택을 지향하는 정책 논의를 유도하는 것⁹⁷⁾이다. 이런 기구를 통한 제도적 보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의식이다. 세대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는 이런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정치 세력을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대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선거 국면에서 세대정책이 논의 대상으로 만들되, 정치권에 의해서 세대균열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되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견제 기능은 세대균열이 세대정책을 의제로 만드는 순기능을 살리되, 세대균열이 과열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기구는 사회적 균열의 정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 나타난 세대주의는 이미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서 일정 부분 허구적인 측면이 드러났다. 하지만 정치권, 언론이나 학계에 의해 나타나는 세대주의가 심화되는 양상에 의해서, 각 세대에 세대의식이 ‘이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현대사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나 정치인의 언행 등을 통해서 세대갈등으로 비화되는 움직임이 보인다. 또, 이런 이식된 세대의식은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는 세대 사이의 차이로 어느 정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대 사이의 연대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례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헬조선, 수저론, 노오력’과 같은 용어는 모든 청년층이 동일한 경제 상황에 있지 않다는 점(수저론)에서 세대주의에 대한 저항의 의미와 현대 한국사회의 현실을 만든 기성층에 반감이 들어난다는 점(헬조선, 노오력)에서 잠재적인 세대갈등을 예고하는 의미를 볼 수 있다. 이런 유행어가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에서

97) 이 부분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은 전제되어야 한다. 제도를 잘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⁹⁸⁾로 언급된 점은 유행어에 대한 기성층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청년층 사이에 유행하는 유행어는 한국사회가 세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인지, 세대 사이의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서있음을 의미한다. 유행어는 세대의식에 대한 거부감이 사회 표면에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부감이 본격적인 세대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은 자신이 거부하는 대상이 기성층이 아니라 세대주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기성층은 청년층의 현실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 사이의 유행어의 거부 대상이 기성층이 아니라 세대주의인 이유는, 모든 기성층이 청년층에게 자기계발담론을 권유하지 않았으며, ‘불안정한 현실’을 만든 것은 일부 기득권이지 대다수의 기성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다수의 기성층은 그런 ‘불안정한 현실’에서 대다수 청년층과 함께 내던져진(被投) 상태일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구도를 만든 기득권에 대항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기성층이 연대의 대상일 수 있다. 또, 기성층은 청년층의 자조(自嘲)가 단순히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년층에 주어진 불안정한 현실로 부터의 불안에 기인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양상이다. 언론이나 향간의 유행어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이 일상적인 것 같지만, 진작 선거 국면에서는 선거균열의 정도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세대갈등 존재의 이중성은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이 시작될 조짐이지만,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세대갈등의 양상을 진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골든타임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한 가지 방법은 세대균열에 의한 단일균열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제 개선과 세대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한 해결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또, 각 세대에 세대의식이 이식되는 양상에 대해서, 각 세대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통한 해결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은 사회구성원이 이런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98)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의 일부이다. 원문은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이다. [김민섭(2016.08.29.)]

〈참고 문헌〉

〈논문, 정기간행물〉

1. 강원택(2002). 『세대, 이념과 노무현 현상』, 사상
2. 강원택(2010). 『천안함 사건은 지방선거의 변수였나』, EAI OPINION Review Series
3. 김경환(1997). 『젊은 이인제의 '절반의 실패'에 담긴 의미』, 월간 '말'
4. 김선기(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5. 김선기(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언론과 사회
6. 김우성·허은정(2007). 『베이비붐세대, X 세대, Y 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7. 김종대(2012). 『연이은 북풍 패키지 기획 결국은 선거용인가?』, 민족21
8. 김진하(2010).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현대정치연구
9. 김진하(2008).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현대정치연구
10. 김만흠(1994).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11. 김태일(2001).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보
12. 김형준(2004). 『17대 총선과 세대-정당 지지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3. 노환희·송정민(2013). 『세대균열에 대한 고찰: 세대효과인가, 연령효과인가?』, 박찬욱(2013) 수록
14. 박명호(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5. 박재홍(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16. 성경룡(2015). 『이중균열구조의 등장과 투표기제의 변화』, 한국사회학
17. 송호근(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삼성경제연구소
18. 신광영(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19. 신정관·임준형(201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영향 요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 신현중(2008). 『OECD국가의 아동 및 노인복지 지출규모의 상쇄현상 추세와 아동빈곤율과의 관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 오찬호(2010). 『88만원세대를 읽어내는 딜레마』, 문화과학
22. 온만금(2004). 『2002 대통령선거에서 지역과 세대』, 사회연구
23. 윤상철(2009).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경제와 사회
24. 이남영(2008). 『지역주의와 세대갈등 :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5. 이내영·신재혁(2003). 『세대정치의 등장과 지역주의』, 아세아연구
26. 이내영·정한울(2013a).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27. 이내영·정한울(2013b). 『세대요인이 18대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 세대별 투표행태 및 구성효과를 중심으로.』, EAI.
28. 이동연(2004). 『[특집 : 위기의 청년]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문화과학
29. 이동후·김영찬·이기형(2004). 『IT 와 ‘신세대’문화의 형성, 확산과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0. 이승중(2001).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보
31. 이정진(2007). 『한국의 선거와 세대갈등: 제16대 대통령 선거과정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
32. 이정원(2015). 『노동시간 피크제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노동자연대
33. 전상진(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인구학
34. 전상진(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35. 전상진(2010).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한·독사회과학논총
36. 정진민(1992).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37. 정진민(2002).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내부조건』, 한국정당학회보
38. 정진민(2012).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 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9. 조기숙(1997).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보
40. 조진만·최준영(2006). 『1인 2표 병립제의 도입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보
41. 조현연·김정석(2016). 『박근혜 정부의 ‘다원적 두 국민 전략’과 세대갈등 - 공무원 연금과 임금피크제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42. 주창윤(2006).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43. 최영진(1999). 『한국지역주의 논의의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44. 최영진(2016). 『한국지역주의 논의의 재검토 : 정치적 정체성 개념과 동기부여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45. 최명민(2010). 『문학에 투영된 자살의 심리사회적 이해: <광장>과 <숲속의 방>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46. 최준영·조진만(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이념과 세대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7. 한상익(2013). 『2표병립제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투표』, 한국정치학회보
48. 한완상(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사상
49. 황아란(2008).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선택과 정당태도의 복합 지표 모형』, 현대정치연구
50. 홍영란 외(2015). 『언론에 나타난 세대갈등의 실태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51. Bengtson, Vern L(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s’ Changing?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52. Berry, William D·David Lowery(1990). 『An alternative Approach to Understanding Budgetary Trads-offs』, American Jounal of Political Science
53. Bourdieu, Pierre(1985). 『The Social Space and the Genesis of Groups.』, Theory and society
54. Goerres, A(2009).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in Europe: The Greying of Our Democraci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55. Liebau, Eckart(1997). 『Generation』, Handbuch Historische Anthropologie
56. Mannheim, Karl(1964[1928]). 『Das Problem der Generation(The problem of Generation)』, Wissenssoziologie. Soziologische Texte 28
57. Michael Busch·Jan Jeskow·Rüdiger Stutz(2010). "Einleitung.", Zwischen Prekarisierung und Protest
58. Rintala, Marvin(1968). 『Political generation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59. Sackmann, R(1992). 『Das Deutungsmuster <Generation>.』 Analyse Sozialer Deutungsmuster
60. Weymann, Anger(1995). 『Modernisierung, Generationenverhältnisse und die Ökonomie der Lebenszeit. Gesellschaftsformen und Generation in ‘Polish Peasant’』, Soziale Welt
61. White, Jonathan(2013). 『Thinking generation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단행본〉

1. 강원택(2013). 《사회계층과 투표선택-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나남
2. 강석경(1987). 《강석경》(우리시대 우리작가 21권), 동아출판사
3. 박찬욱·강원택(2013).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나남.
4. 박민규(2003).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한겨레신문사
5. 박완서(2005). 《엄마의 말뚝》, 맑은소리
6. 박재홍(2005). 《한국의 세대문제-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나남
7. 박종훈(2013).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21세기북스
8. 박혜경(2003).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읽는다》, 열림원
9. 샤희슈나이더(2008).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10. 손호철(1993),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 비평사
11. 우석훈(2007). 《88만원세대-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12. 유시민(2011).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13. 오찬호(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14. 이갑윤(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15. 전영수(2013). 《세대전쟁》, 이인시각
16. 전용주 외(2009). 《투표행태의 이해》, 한울
17. 정성호(2006). 《20대의 정체성》, 살림출판사
18. 정원오(2010). 《복지국가》, 책세상
19. 최장집(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20. 해롤드 J. 라스키(1983). 《국가란 무엇인가(두레신서 6)》, 두레

〈일간지〉

1. 광래전(2016.07.14.). “6월 청년실업률 10.3%… 17년 만에 최악”, 조선일보
2. 구성열(2016.08.08.). “靑年에게 되레 毒 될 서울시 청년수당”, 문화일보
3. 김남일(2016.07.04.). “2030 투표율 늘었지만…6070이 미래 결정했다”, 한겨레
4. 김민석(2013.12.13.).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고대 대자보 ‘술렁’… “속이 다 시원” vs “비약 심한 선동””, 국민일보
5. 김민섭(2016.06.19.). “개인의 ‘노오력’만 강요한 결과는 혐오와 분노의 괴물”, 한국일보
6. 김민섭(2016.08.29.). “헬조선 모르쇠, ‘노오력’만 하라는 정치인·지식인”, 한국일보
7. 김병규(2016.08.14.). “정부-서울시, 이번엔 청년수당 대형 ‘현수막’ 여론전”, 연합뉴스
8. 김보미(2106.04.06.). “구직자 평균 빚 3449만원”, 경향신문
9. 김상수(2016.02.11.). “북풍 혹은 역풍, 선거판 뒤흔든 20년”, 헤럴드경제
10. 김여란(2013.12.12.). “하 수상한 시절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대학가 술렁”, 경향신문
11. 김윤종(2016.07.21.). “청년 1000명에 ‘청년수당’ 물어보니… 찬성 53%, 반대-유보 47%”, 동아일보
12. 김희리(2016.08.03.). “퇴직 공포… 40대부터 줄서는 재취업 컨설팅 4060 중장년 필수가 된 재취업”, 서울신문
13. 매일경제 디지털뉴스국(2016.08.06.). “은퇴해도 다시 돈 벌러 나가는 5060세대”, 매일경제
14. 박광연(2016.08.26.). ““너의 잘못이 아니다’…구의역 사고 희생자 김군 위령표 제막식 열려”, 경향신문
15. 박훈상, 조동주(2014.02.12.). “자기계발 벽 앞의 20대 ‘나’ 아닌 ‘우리’ 문제에 입 열다”, 동아일보
16. 성유보(2014.02.18.). “[길을 찾아서] 박정희 3선 연임 맞서 DJ·YS ‘40대 기수론’”, 한겨레
17. 손병호(2012.11.25.). “박정희·노무현 구도로 勢대결 양상… 朴 친노실정 부각·文

정권심판 기치”, 국민일보

18. 손정협(2016.03.10.). “청년층 빈곤화, 미래가 무너진다”, 뉴스토마토,
19. 신동진·강해령(2016.08.01.). “梨大에 경찰 1000명 투입, 무슨 일이…”, 동아일보
20. 신진우(2016.07.05.). “새누리 참패한 4·13총선, 투표율 보니… 11.9%p 늘어난 20대가 승패 갈라”, 동아일보
21. 신한슬(2016.08.13.). “‘달팽이 민주주의’에 총장은 무릎을 꿇었다”, 시사IN
22. 아사히신문 출구조사팀(2016.07.11.). “18, 19歳の半数、比例区で自公に投票”, 朝日新聞
23. 안승섭·최윤정(2016.08.12.). “정부, 취업 준비 청년에 ‘최대 60만원 수당’ 준다… 2만4천명”, 연합뉴스
24. 양선희(2016.08.09.). “[양선희의 시사각각] 청년과 청년수당은 죄가 없다”, 중앙일보
25. 오현경(2011.02.11.).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홍대생들의 모임 ‘데굴데굴’”, 경향신문
26. 윤석인·원성연(1997.10.27.). “97대선 여론조사 이회창 지지율 급락”, 한겨레
27. 윤지연(2011.01.05.). “홍익대 청소노동자, 88만원 ‘노년’세대를 보다”, 참세상
28. 이남영(2007.12.12.). “세대·이념 변수 쇠퇴”, 서울신문
29. 이동현(2015.12.05.). “또 도진 쪽지예산… 53건 763억 찢어넣었다”, 한국일보
30. 이세형(2015.11.13.).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제도’ 도입 제동”, 동아일보
31. 이용욱·유정인(2013.09.22.). “박근혜 대표 공약 ‘기초노령연금’ 결국 대폭 후퇴”, 경향신문
32. 이용훈·이지은(2014.04.01.). “‘60~70대 투표 안해도 된다’ 鄭의장, 본보 총선기자단 인터뷰 발언 파문”, 국민일보
33. 이정현(2016.03.09.). “더민주,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노인에 30만원 균등지급”, 연합뉴스
34. 이현정(2016.08.13.). “적극 구직 청년 60만원 지원… ‘청년수당’에 맞불 놓은 정부”, 서울신문
35. 임형섭·홍지인(2016.04.14.). “20대 국회 초선 132명…16대 총선 이후 비율 최저”, 연합뉴스
36. 임형섭·류미나(2016.06.15.). “청년 비례대표제, ‘김수민 파동’으로 도마위…빛과 그림자”, 연합뉴스
37. 전종휘(2016.06.01.). “하청노동자 죽음 내몬 ‘4각 카르텔’ 깨야 산다”, 한겨레
38. 장규석(2016.08.12.). “‘취업수당 줄게. 서울시 청년수당 받지마’…고용부의 안간힘”, 노컷뉴스
39. 정남구(2010.06.20.).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한겨레
40. 정용인(2016.08.13.). “청년수당 서울시·정부 ‘진실게임’ 누가 거짓말하나”, 경향신문

41. 정원식(2013.03.30.). “‘김미경식 힐링’은 끝났다”, 경향신문
42. 정혁수, 김지산(2013.12.15.). “철도파업, '안녕세대' 뇌관될까...고심하는 정부”, 머니투데이
43. 조홍민(2007.12.20.). “20·30代도 40% 넘게李 지지...曁은 20대서 최다 득표”, 경향신문
44. 천관율(2016.08.13.). “어느날 상아탑에 관료가 나타났다”, 시사IN
45. 최경환(2016.07.21.).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취업 희망 "생활비 보태기 위해", 뉴스1
46. 최성진·박수지(2015.05.10.). “젊은층 ‘정부가 ‘세대간 도적질’이라는데 연금 개편 반기겠나”, 한겨레
47. 최윤정(2016.08.03.). “‘취업 디딤돌’ vs ‘도덕적 해이’...청년수당 결국 법정으로”, 연합뉴스
48. 최찬홍(2016.08.07.). “베이비부머 4가구 중 1가구 노후 '절대 빈곤'〈경기研〉”, 연합뉴스
49. 최희진(2016.06.19.). “[정리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6시간 미스터리'”, 경향신문
50. 허남설·김한솔(2016.07.17.). “남경필·안희정 심상찮은 행보...여야 ‘세대교체론’ 물꼬 트나”, 경향신문
51. 홍기현(2002.12.16.). “세대갈등의 정치경제학”, 한국일보
52. 홍수민(2016.08.08.). “이기권 장관 "청년 수당, 청년일자리 정책 근간 흔들 수 있다””, 중앙일보
53. 황수영(2015.09.14.). “[지방자치 20년] 〈7〉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매일신문
54. 황보연(2016.03.24.). “흙수저 저소득 청년 월세비율, 금수저 고소득 청년의 '3배’”, 한겨레

〈인터넷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0). “연령 및 성,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 시군구”, <http://kosis.kr/>
2.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수당”, <http://youthhope.seoul.go.kr>